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도날드 존스턴

오늘 저는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 세계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과 투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두번째로는 OECD 자체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과 투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과 관련된 OECD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끝을 맺겠습니다. 저의 OECD 사무총장 취임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국가—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이 이룩한 활기찬 분위기와 엄청난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한국이 OECD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환영하며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한국은 적절한 절차가 끝나게 되면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OECD와 세계경제의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당면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와 무역의 세계화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저에게 시지프스의 신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시지프스는 신화에 나오는 희랍의 왕으로 그는 커다란 돌덩어리를 영원히 산 위로 올려야만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돌이 자꾸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 신화에 보면 지금도 계속 정상에 올려놓으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한 이 시지프스의 신화와 세계화의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돌은 세계적인 다자간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시대에 범세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최근에 상당한 성

과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특히 통신과 운송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품의 최종 조립과정에 투입되는 부품들이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정도의 세계무역이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국도 중요한 기여를 했고, 또한 많은 혜택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1994년도 통계로 볼 때 한국은 960억 달러의 수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세계무역의 2.4%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자본에는 국경이 없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컴퓨터 속도만큼 빠릅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의 꿈, 그리고 인구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일,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 무역과 투자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끝부분에서 OECD와 관련지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주의나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세계화에 의해 위협받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방법을 통해 그들로부터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미국에서도 자국을 요새화하려는 이러한 종류의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미국의 예비선거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업률이 대단히 낮은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진데, 실업률이 두 자리 숫자에 달하는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에서 보호주의가 더 강하게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지프스의 문제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가 출범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상황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저하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있으며 시지프스의 입장처럼 자꾸 원점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설 속의 코린스 왕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만일 시지프스가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단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돌 밑에 다른 버팀돌을 받침으로써 돌이 다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더라면, 그의 전진 속도는 비록 느리거나 가끔 멈추는 경우는 있을 지라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돌을 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버팀돌을 투자와 무역에서 찾아냈습니다만 그것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법적인 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규칙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WTO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그리고 OECD의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그 규칙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를 전진시켜야 합니다. WTO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도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에게 OECD의 역할과 함께 무역과 투자에 대한 문제가 어째서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OECD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후 OECD의 발자취와 매 시기의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세계화 상황에서 OECD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2차대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영토확장 야심과 이념적인 욕심을 우려해서 미국은 유럽 재건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마샬 플랜'이라 명명된 엄청난 규모의 자본 투자인데, 대략 130~140억 달러가 마샬 플랜을 위해 투자되었습니다. 그것을 맡아서 수행한 기구가 파리에 본부를 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과 동구 위성국들에게도 참여를 권유하였지만, 그들은 스탈린 정부의 압력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서구 여러 나라들이 회원국이 되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리하여 OEEC라고 부르는 유럽경제협력기구가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캐나다는 유럽의 재건에 기여를 했지만, 마샬플랜 자체에 참여하지는 않고 준회원으로 참가했습니다.

12년 후인 1960년대에 OEEC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자,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그 결과 OECD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들간의 관계도 OEEC 시절의 도움을 주는 나라와 도움을 받는 나라라는 관계로부터 동등하고 상호의존적인 국가들 간의 협력기구로 바뀌었습니다. 상호의존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간의 협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실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실행을 설계하여 서로 참고했습니다. 또 빠르게 변하는 국제환경에 적합한 정책적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많은 지적 자원을 상호 활용했습니다. 공통의 데이터 뱅크를 만들어서 국가간 비교·분석에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1960~61년에 설립된 OECD는 그 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OECD와 접촉이 있는 정부나 기업에서만 알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OECD는 IMF, WTO,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유럽-북미라는 요람을 떠나 27개 회원국으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동구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회원국이 된 체코와 헝가리를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도 OECD의 회원국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OECD에 가입하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세계화 추세에 따라 OECD는 회원국을 확대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과 동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원국이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OECD의 문화가 손상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OECD문화는 건설적 대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비슷한 성격의 국가들이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진국들이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원국의 확대와 OECD성격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OECD가 당면한 주요 과제인 것입니다.

OECD는 초기부터 풍부한 재원에 힘입어 회원국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즉,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OECD는 개방된 시장, 무역자유화, 재정상의 책임, 물가안정 등을 강조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른 기구와는 달리 OECD는 세계적이고 국가를 초월하는 시각과 여러 학문(경제학, 정치학, 그리

고 점차로 환경공학)간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정기적인 모임에서 OECD는 정책입안자들과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여러 학문의 틀 속에서 공통의 이익에 대해 함께 협의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하에 200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어서 방위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공공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OECD는 국제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계경제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만약 지금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OECD가 없었더라면 OECD와 같은 기구를 꼭 만들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OECD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3~74년 OPEC국가들의 원유 금수조치와 카르텔을 통해 엄청난 富가 산유국으로 이전된 반면 OECD국가들은 엄청난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즉 OPEC의 카르텔에 대한 대응방법과 OECD회원국 자신의 국내 경제문제—경제불황—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OECD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파리에 창설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IEA는 미래의 원유공급 위기에 대한 문제나 금수조치가 발생할 때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나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OECD는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게 되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4년 OECD가 회원국들에게 체결토록 한 무역서약(Trade Pledge)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역규제를 통해서도 불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OECD는 불황을 예측하고, 만성적인 인플레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예측해야 했으며, 인플레이 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 레네프(E. Van Lennep)사무총장 시절에 OECD는 경제발전에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정부간에 환경문제를 다루는 위원

회로서는 처음으로 환경정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OECD안에 있는 환경이사회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재의 페이(J.C. Paye)사무총장 하에서 OECD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창설에 중요한 분석적인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농산물 보조금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각국에서 자기나라 농민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은 농산물 분야의 협상에 상당히 장애가 되었습니다. OECD는 여기에 관련해서 생산국 보조금 상응액과 소비국 보조금 상응액(CSE)이라는 분석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며, OECD회원국들 모두 보조금을 책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WTO의 120여 개 회원국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2년 전에 OECD가 발행한 JOB-STUDY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창출과 실업문제를 유럽, 북미, 아시아-태평양지역간에 비교한 아주 종합적인 연구로써 이런 종류의 연구로는 최초의 것입니다. 이것은 Detroit에서 열린 G-7정상회담의 아주 중요한 의제였고, 몇 주전에 Lille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OECD가 수행해 온 주요한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미래, 앞으로 OECD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를 보며 저는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Keynes)가 정의내린 ‘뛰어난 경제학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뛰어난 경제학자는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수학자이어야 하고 역사학자, 통계학자, 철학자라야 한다. 아울러 기호도 이해할 수 있고,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또한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연구함으로써 미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특성, 개인의 문제는 완전히 생각 밖으로 보내야 하고, 목적의식이 있으면서도 그와 함께 일어나는 인간적인 감정에 무관심해야 한다. 무관심하면서 예술가처럼 부패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정치인만큼이나 현실에 가까와야 한다.”

사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케인즈 자신도 이러한 특성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기구로서 OECD야말로 이러한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개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기구로서 OECD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가적인 광장을 제시합니다. 또한 철학자는 아니지만 철학을 추구합니다. 개방시장경제란 철학에 의해 지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OECD의 성과에서 나타나듯이 실제로 OECD는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확고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저의 전임자들이 구축해 놓은 OECD의 특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가능하면 이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OECD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 감축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OECD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보다 적은 재원으로 보다 많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를 개혁하고 업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가장 우수한 조직을 만듦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대수술은 회원국들이 OECD에 기대하는 역할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OECD예산의 25%는 미국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다면 활동에 상당한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이 이러한 전례를 따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경제계, 학계, 그리고 언론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해보면 OECD가 했던 훌륭한 많은 일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OECD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짐작됩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의회 의원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의원들이 OECD가 공공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지난 35여 년동안 세계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는 사실을 알고 OECD에 출연한 돈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 OECD의 예산 삭감을 반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게 되면 OECD활동의 중요성을 국회의원들과 대학, 학계, 언론계,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OECD가 제시하는 모든 정책, 대안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OECD의 정책은 상당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다자간의 자유무역과 투자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금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적인 다자간 자유무역과 투자 문제라는 긴 여정을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인가, 왜 보호주의를 극복해야 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해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인 인구시한폭탄의 해체 문제 등은 성공적인 무역과 투자를 통해서만 해결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구라는 시한폭탄을 해체하지 못하면 앞으로 50년 안에 세계인구가 120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구는 사실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맬더스(Malthus)씨의 악몽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기로 이러한 인구시한폭탄은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산업발전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고,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만든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해 주어야만 해결됩니다. 자본은 존재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의 투자기회와 투자환경이 세계적인 투자환경 기준에 맞아야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은 예외이지만 다른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높은 실업률과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성장기마저도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창출로 인해, 경쟁적인 제 3세계의 수입품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항과 이것을 이용하려는 정치가들을 극복하는 데 주요한 조정계

획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문제들 속에서 OECD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역에 관해서 보면 WTO는 아까 말한 그 돌덩이를 산 위로 끌어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지에도(Renato Ruggiero) 사무총장에게는 강력한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이 있기 때문에 OECD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WTO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통상문제 현안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환경문제, 무역과 노동기준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뇌물이라든지 돈 세탁,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자금이전, 수출신용협약제도 등이 또한 포함됩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들은 세계화가 추진되어감에 따라 개방시장무역제도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OECD는 이러한 분석을 하기에 대단히 좋은 입장입니다.

OECD의 두 번째 역할은 투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는 현재 투자에 관한 다자협약(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 각료회담에서 완성될 MAI의 목적은 통상문제를 보완하고, 투자보호와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자본과 배당금 송금을 신속하게 하고, 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현존 쌍무협약의 여러 형태들을 대체할 것이고, 이중과세에 대한 OECD의 모델 이상으로 비회원국들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MAI는 필요한 요건을 수행할 수 있고,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나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회원국들이 이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FDI라고 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DI는 지난 10여년 동안 무역의 증가보다 네배나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FDI가 가져다준 괄목할 만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00개의 쌍무협약 중에서 60%가 최근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NAFTA, MERCOSUR, APEC같은 지역내 협력조약

도 생겼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싶어하며 법적인 절차라든지 분쟁해결 방법 같은 것도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MAI의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밖에 남지 않은 2020년까지 전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 비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러한 비전 속에서 공통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구시한 폭탄을 해체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자간 자유무역환경을 만들고, 투자에 대한 보편적 규칙을 수용함으로써 그것을 보완하려면, 우리는 그 목적들을 위하여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은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교환되어 자본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자본이 혁신을 통해 다시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하여 끊이지 않고 부를 창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때때로 유럽에서 사회적 응집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안정은 점점 증가하는 경제혜택과, 세계시장에서 창출된 부가 사회전체에 고루 배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 요소는 안정되고 효율적인 민주적 정치제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두 요소를 지지하는 공공정책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 세 가지 요소—경제성장, 사회안정, 그리고 정치적 안정—를 저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PSEP: political, social, economic paradigm)이라고 부릅니다.

PSEP의 요소 중 어느 한 가지가 없다면, 다른 요소만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OECD의 중심적인 역할은 회원국들이 이 요소들 사이의 어려운 균형을 이룩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정책 옵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나라안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에는 점차 전세계적으로 균

형을 확장해야 합니다. PSEP는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간에도 획득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OECD의 역할이 있고 회원국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혁신을 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리 채택하여 실시해야만 합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주요한 시장의 잠재적 소비와 혁신과 결합된 창조적 파괴는 더 많은 경제적 성장과 부의 창조를 약속합니다. 기업들은 자본과 혁신을 묶어주는 중매쟁이들이고, 더 많은 성장과 부를 만들어 내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다른 한 부분에서, 주요하게는 사회안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번영하고 평화로운 세계 공동체라는 우리의 비전이 위협받게 되고 결국은 파괴될 것입니다.

다운사이징(Downsizing), 디레이어링(Delaying), 대량 해고 등은 단지 일종의 경제적 조정과정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패러다임을 불안정하게 하고, Neo-Luddite사고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기술적 과정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창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강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들의 주장이 OECD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주는 단기적 영향은 정치적인 수준을 넘어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보다 더 큼니다.

해답은 세계화라는 시장의 힘을 규제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조정과정을 빨리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위협받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단지 자신이 속한 사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세계화의 혜택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자간의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자유투자는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으로써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OECD회원국으로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경제정책은 반드시 사회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의 균형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OECD는 정부가 이 패러다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ECD가 참여하는 분야는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평생교육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 인적자원의 개발, 숙련되고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발굴,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 광범위한

조정개혁계획 등으로 다양하며, OECD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의 활동에 대단히 광범위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또 더 많은 정책 대안이나 옵션들은 패러다임의 균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거시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좀 더 완곡하게 말하면 개방시장경제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범위한 세계시장이 가진 마력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성장의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룰 때까지 OECD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지프스의 정상은 아직도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질 의 김영재 (한국증권거래소 연구위원)

경쟁이 치열한 세계경제상황에서, 특히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이 OECD에 가입했을 때 이로운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계경제의 세계화 및 블록화 추세에 대해서 OECD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응 답 존스톤 총장

지금까지 저는 현재와 같이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갖는 OECD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OECD는 협력과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경제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이 됨으로써 한국이 얻는 이로운 점은 이러한 과정에 충분

히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은 여러 OECD위원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OECD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의 말씀에 좋은 증거가 되고, 또 저의 말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혜택을 보는 것이 한국만은 아닙니다. OECD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한국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범위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실험을 포함하는 전 영역이 될 것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까지 포함됩니다. 즉, 사회경제적인 문제, 개발도상국의 문제, 그리고 더욱 민감하고 실질적인 문제—향후 25년을 내다볼 때 항공운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와 산업이라든지 또는 회사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OECD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은 수송분야의 경우에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자원을 한국이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내 특혜무역 블록의 성장은 세계적인 다자주의의 성장을 다소 저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WTO나 OECD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WTO회원국, OECD회원국들의 관심을 갖고, 확인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로 발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내 국가들은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해 왔고, 그러한 제도는 WTO에서보다 지역 내 특혜무역 그룹 내에서 효과적으로 전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지역의 특혜제도들은 다자주의로 가는 디딤돌들입니다.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단순히 보호주의자들의 영향을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다자주의로 가는 장애가 된다고보다는 다자주의로 가는 하나의 발전과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장애를 만들겠다는 누군가의 의도라기 보다는 다자주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이선희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1994년 멕시코의 폐소화 위기와 멕시코의 OECD가입이 시기상으로 일치했던 이유로 인해, 양자간에 어떤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급속도로 전개되는 한국의 금융시장 자유화, 특히 자본시장 자유화와 관련하여, 이것이 한국의 OECD 가입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존스톤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존스톤 총장

우선, 저는 OECD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부터 제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의 폐소화 위기를, 거리를 두고서지만 아주 면밀히 주시하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양자 사이에 어떤 연결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OECD회원과 폐소화 위기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멕시코의 OECD가입 문제를 담당하면서 저와 여러 차례 오고가곤 했던 슈리케(Schricke)씨가 저에게 지적했던 것으로, 멕시코는 그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위기를 견디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방된 자유경제를 향해서 멕시코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런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멕시코가 지금과 같이 OECD회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계속 활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질의 세실리오 가르시아 (주한 멕시코 대사)

존스톤 사무총장께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계속해서 합의의 원칙을 고수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OECD회원국이 되려면 반드시 '77 그룹'을 떠나야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응답 존스톤 총장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OECD입장에서 한 나라가 OECD회원국이 되면 그 나라는 77그룹을 떠나야만 합니다. OECD내에서 회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77그룹의 회원자격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입니다. 멕시코도 그렇게 하였으며, 한국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합의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OECD회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합의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합의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대단히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본으로 어떤 활동의 지출을 폐지하거나 감소시키고, 어떤 활동은 그 중요도에 따라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합의를 도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일반 정책문제에 있어서 합의는 대단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OECD회원국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는 대단히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질의 이상설 (월정 인터내셔널 사장)

OECD에 준회원국은 없습니까? 우선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완전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세계화가 이루어졌을 때 정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응답 존스톤 총장

OECD에 준회원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점점 OECD활동과 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

지 않았습시다라는 가입절차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만일 가입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도 한국이 OEC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입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 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의 신혜인 (한국국제협력단 과장)

OECD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응 답 존스톤 총장

아무도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OECD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개발도상국에 집중시킴으로써 그들이 세계시장에 완전히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OECD의 공적 개발원조는 사적 자본이동인 FDI와는 반대로 총투자의 대략 25%정도가 개발도상국에 투자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내국인 대우, 투자보호, 뇌물이나 부패가 알려진 나라에서는 의사결정과정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개발도상국에만 민간부문의 자본이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경제가 빠르게 자유화하고, 투자환경이 투명해지고 투자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들에는 대단히 커다란 규모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그와 같이 자본을 빨리 유치하려면 그러한 환경을 만들도록 빠르게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직접투자, 기본적인 인적자원의 인프라, 세계은행의 업무, 그리고

개발원조위원회(DAC)와 개발센터(DC)라는 두 위원회를 통해 열심히 활동하는 OECD회원국들의 원조기구가 또한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질 의 조동성 (서울대 교수)

OECD 회원국수가 늘어나서 완전히 선진국이 안 된 나라까지 회원국이 됐을 때, 원래의 OECD 철학과 목적, 그리고 의사결정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답 존스톤 총장

‘완전히 선진국이 안 된 나라’라고 표현하셨는데, 선진국이 무엇이나 하는 정의도 애매합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중요한 것은 OECD에는 “성격이 비슷한” 관리 가능한 회원국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실행과 공통의 경험 등을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어느 정도 발전의 정도가 비슷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나라들 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회원국들간에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있어야만 OECD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OECD회원국들이 이런 나라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한국의 OECD가입이 또 하나의 새롭고 중요한 차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완전히 선진국이나 하는 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한국은 대단히 발전된, 선진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균형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동질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협력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